

I. 규제혁신! 언론보도된 현장으로 해소

01

드론 및
자율차

1.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동아일보('16.1.21)

드론...규제에 가로막힌
신성장산업



사업범위를 촬영·농업
관측으로 제한 등



공연, 광고 등
모든 사업 허용 등

☺ 향후 10년간
취업유발 3.1만명, 경제효과 12.7조원

2. 자율차 시험운행 구역 네거티브 전환

조선일보('16.1.21)

美는 자율차
상용화 허용 수순
韓은 관련법도 없어



지정 구간
내에서만 허용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향후 10년간
취업유발 8.8만명, 경제효과 23조원

3. 초소형 전기차 도로운행 허용

한국경제('16.3.24)

유럽선 상용화됐는데
'트위지' 운행 막는 30년 묵은
자동차 관리법



국내 관련 규정이 없어
상용화 불가



외국 기준이 있는 경우,
先도입 後보완

☺ 新 유형 교통수단 개발·도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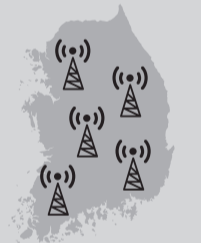
02

ICT
융합
신산업

1.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지원

전자신문('15.12.22)

사물인터넷 주파수
출력이 낮아 경제성 저조



900MHz 대역 출력기준
10mW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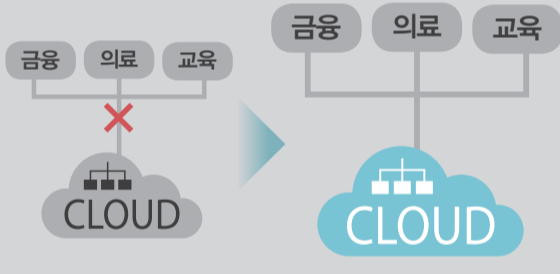
200mW로 확대

☺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

2.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 개선

매일경제('16.4.6)

클라우드컴퓨팅은 생존을 위한
선택...규제로 뿌리내리기 어려워



금융·의료·교육
클라우드 사용불가

(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
(의료)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 허용
(교육) 원격교육 전산설비 요건 완화

☺ 선도국 수준으로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3. 공유민박 영업일수 확대

프라이미경제('16.3.17)

성급한 '공유민박법' 경제적
효과 '외눈박이' 아니길
(숙박일수가 120일로 제한)



영업일수 4개월



영업일수 6개월

☺ 온라인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촉진

03

바이오
헬스케어

1. 조건부 허가 대상 확대

뉴스1('16.2.21)

바이오벤처업계, 조건부 허가대상
범위에 난치병도 포함 요청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제도* 운영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
생명위협질환까지 확대

* 조건부 허가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자료로만 허가

☺ 바이오신약 시장진입 2~3년 단축

2. 임상시험 어려운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아시아경제('15.5.14)

WHO, 한국기업 개발 중인
에볼라 백신 임상 단축 논의



윤리 문제로
임상시험 불가



동물실험 후 판매 허가,
사용단계에서 평가

☺ 신종감염병, 생물 테러 등에
신속 대응

3. IT 기반 첨단의료기기 진입 완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U헬스 게이트웨이"
허가 심사 완화 필요



위해도 낮은 IT기반
의료기기도 허가 대상



신고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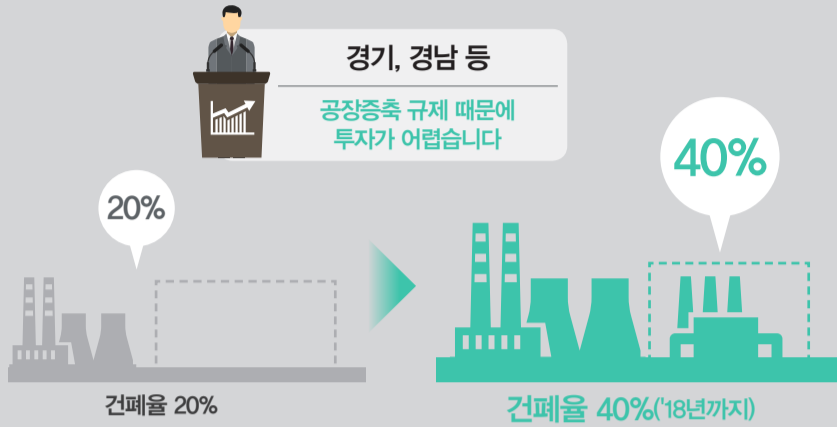
☺ 첨단의료기기 심사기간 단축
(25일 → 즉시)

II. 규제혁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언론보도된 현장으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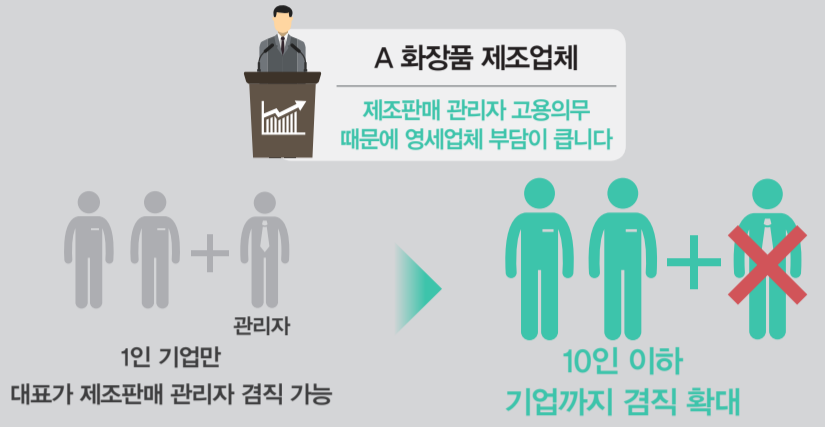
01 선제적 규제정비

1. 보전지역 기존 공장의 증개축 한시 허용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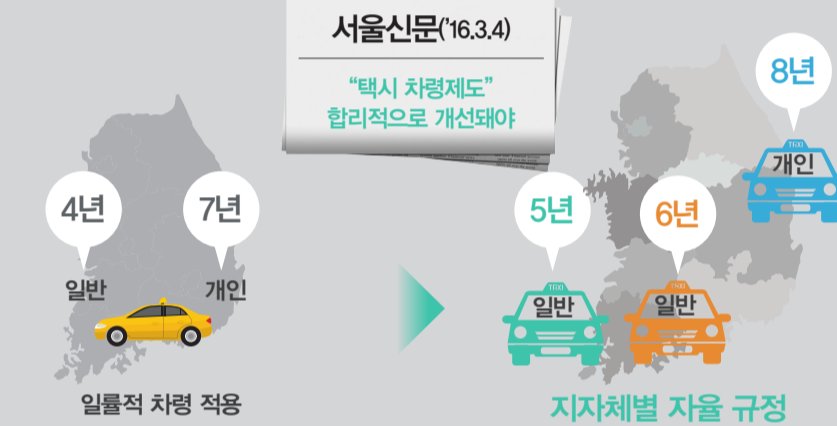
약 150억원 투자, 300여명 고용유발

2. 화장품 제조업 과도한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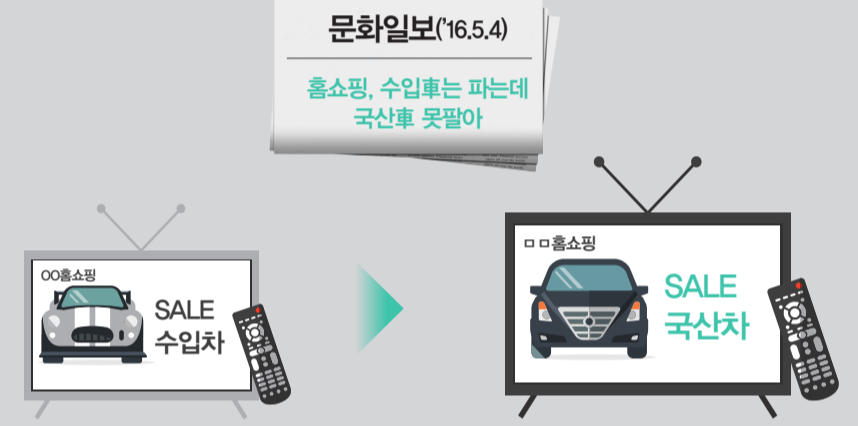
소규모 화장품 업체의 고용부담 경감

3. 택시차량 규제를 지역별로 자율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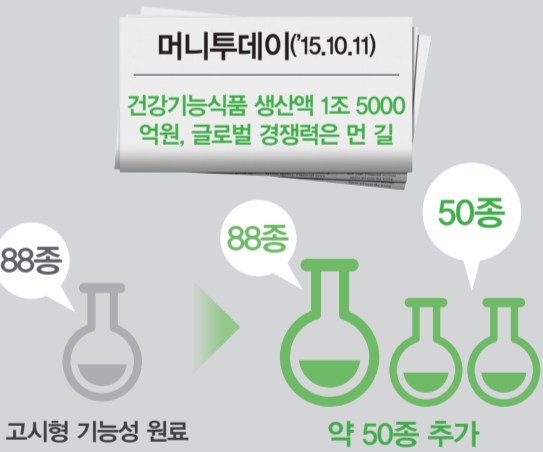
4. TV홈쇼핑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TV 홈쇼핑 사업자 및 국산 자동차업체 판로 확대

02 농식품 선진화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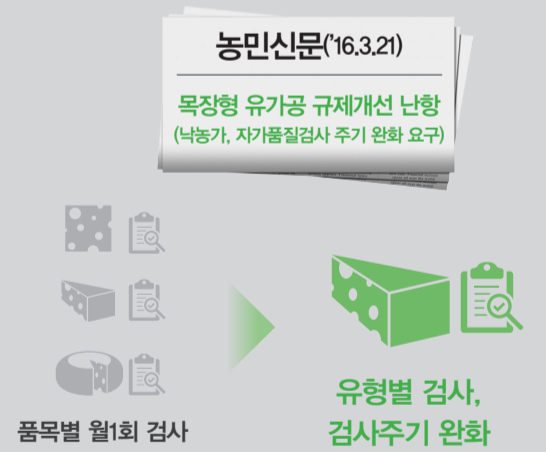
'17년까지 경제적 효과 3,409억원, 고용창출 750명

2. 동물간호사 신설



동물병원 보조인력을 전문인력 (3,000명)으로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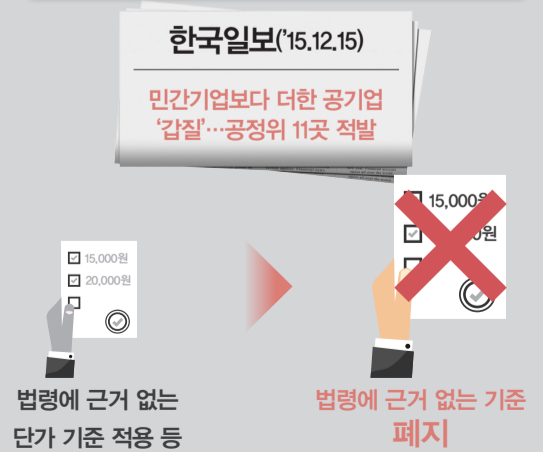
3. 소규모 유가공업 검사부담 경감



경기 H목장, 1/4 수준으로 검사비용 절감

03 지역경제 활성화

1. 지방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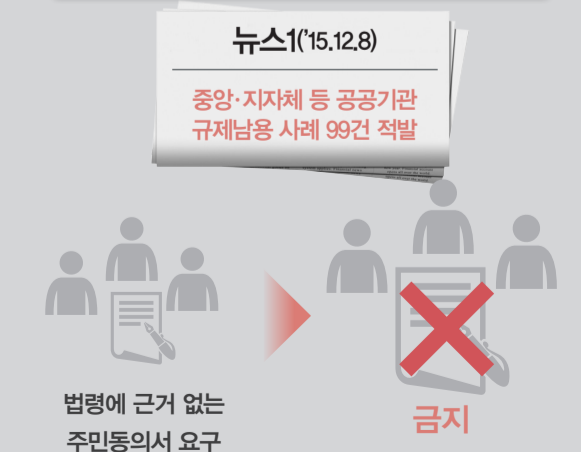
기업의 일방적 부담 경감

2. 대체 진출입로 확보시 공장입지 허용



820억원 투자, 100여명 고용유발

3. 과도한 서류 요구 관행 개선



청주 A 레미콘 공장, 주민동의서 없이 입주 가능